

제13대 전북자치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본격화

민주당 42석으로 다수... 의원총회 결과가 본회의 선거 결과로 이어질 듯 17~19일 의장단 등 후보자 등록... 22일 민주의원총회 열고 후보자 선출 의장 후보에 김희수·이명연·김대중 의원... 부의장은 상대적으로 윤곽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다음 달 1일 공식 개원을 앞두고 전반기 원 구성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도의원 44명 중 42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25명의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총 44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42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비례대표 1석씩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본회의의 선거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민주당 소속 도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하는 제1차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 공보 결과 제

선의 정중복 의원(전주시 3)이 단독으로 등록해 사실상 선출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아 오는 22일에는 제2차 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장단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날 결정되는 후보군이 향후 본회의의 선거에 나설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원 구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의장 선거에 쏠리고 있다. 현재 전반기 의장 후보로는 모두 3선 의원인 김희수 의원(전주시 6), 이명연 의원(전주시 10), 김대중 의원(익산시 1)이 거론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도의회는 초선 의원이 25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는다. 재선 의원 14명, 3선 의원 5명으로 구

성된 만큼 초선 의원들의 선택이 의장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표심이 형성될 경우 기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의장 선거는 상대적으로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태다. 제1부의장에는 3선의 이병도 의원(전주시 1)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제2부의장에는 재선의 윤수봉 의원(완주군 1), 박정규 의원(임실군), 진형석 의원(전주시 2)이 허마평에 오르고 있다. 진 의원은 같은 전주권인 이병도의 원과의 지역 안배 문제 등을 고려해 진퇴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인선 역시 상당 부분 교통정리가 이뤄진 분위기다. 기획행정 위원장에는 염영선 의원(정읍시 2),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는 권요안 의원(완주군 2),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는



김희수 의원



이명연 의원



김대중 의원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어 7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원 구성 마지막 날인 7월 3일에는 운영위원장

김동구 의원(군산시 2), 문화안전소방 위원장에는 김성수 의원(고창군 1), 교육위원장에는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운영위원장에는 강태창 의원(군산시 1)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를 놓고는 재선의 한정수 의원(익산시 4)과 임종명 의원(남원시 2)이 경쟁하다가 임종명 의원이 후반기 위원장을 맡기로 교통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재선 의원이 중심을 잡고 사전에 상임위원장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큰 물의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에 나선다. 개원 첫날인 7월 1일에는

선출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최종 마무리된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번 원 구성이 향후 2년간 전북도의회 운영 방향은 물론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도의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만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 달 1일 개원과 함께 새로운 전반기 의장단 체제를 출범시키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01만호기자

재난·공급망 위기 특단 매점매석 행위 강력처벌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재난 및 물품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5일 매점매석으로 얻은 불법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1억 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수습업 원대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들에게 대한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난과 공급망 위기를 틈탄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불법 수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매점 매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정읍=김대환기자

도, 장마철 앞두고 재해예방 현장 점검

김 지사, 진안·무주 찾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진안·무주의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산사태와 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맞아 산립과 하천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들여다보고, 도민 피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립유역관리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6,5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712m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립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재난 방지 체계를 구축해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를 예방하고 유역 전방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모두 304억원 규모의 사방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사방댐 31개소와 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21.4ha, 산립유역관리 15개소 등을 조성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진안·무주의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찾아 산사태와 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주군 칠천면 구천 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과 우기 대비 안전대책을 챙겼다. 구천동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70여억원을 투입해 제방과 교량, 데크 등을 손보는 것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이날 제방 안전성과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함께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여부, 비상 대응체계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특히 구천동천계곡 일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무주군은 평상과 그늘막, 불법 경차 등 하천 점용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 정비가 통수 가능 회복과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계곡 경관 개선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여름은 예년보다 강한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립과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꾸준한 예찰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01만호기자

군산시의회 마지막 회기 개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총 11건 안건 심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5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대 군산시의회의 마지막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제2대 군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건의 의안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1건의 건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먼저 김우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새만금 권역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취지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및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추진된다면 실속 없이 혼란만 날게 될 것이라며 구상의 실질적 의미와 추진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안관광구역 확장법률안의 폐기 △신항만의 명칭은 군산항으로 지정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은 관할권과 분리를 주장하며, 이를 덮어두고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군산시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확정 법적 기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군산시의회의 국회가 조속히 선거구 확정 관련 법률 정비와 안정적인 선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확정을 법정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실시 △선거구 확정 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현재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난 2025년 1월부터 새만금지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고자 활동해 온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16개월간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및 범시민 결집대회 등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산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가차별 정책 및 새만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 왔었다.

/군산=김만호 기자

'도지사직 인수위 상생발전특위 위원장' 허강무 전북대 교수

"호남·제주, 함께 가야 미래가 있다" | 전북·전남광주·제주 상생발전 청사진 제시

"지역 공동 미래자산 활용이 상생협력의 핵심"

"행정통합이 아닙니다. 경제와 문화, 관광과 에너지 분야에서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이자 전북·전남·광주·제주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허강무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호남권과 제주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남부권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체결된 '전북·전남·광주·제주 상생협력 공동선언'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 협력체계를 통해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북

과 전남·광주, 제주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호남·제주 메가시티'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행정 통합이나 지역 통합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허 위원장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이 연대해 공동사업을 발굴할 경우 국가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구상하는 상생협력의 핵심은 공동의 미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상이다.

실제로 세 지역 단체장 후보들이 체결한 공동선언에는 민주·인권·평화의 역사교육 협력, 재생에너지 공동 대응, 해양·섬 관광벨트 조성, 고항상기부제 연계, 위계이전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해상 교통망 강화, 농수산물 공동 판로 확대, 청소년·청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담겨 있다.

허 위원장은 이 가운데 문화관광과

에너지 분야를 가장 유망한 협력사업으로 꼽았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한옥마을, 전남의 섬과 바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연결한다면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전남·제주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연계하면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이 발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허 위원장은 1968년 전주

출생으로 전주에서 성장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전북대학교에서 취득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7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3년 모교인 전북대학교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는 전북 미래산업 R&D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100여 명의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발전 정책을 제안하며 활동했다. 무엇보다 허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지역 소멸을 막고 전북이 인구가 늘어나는 등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균형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과 전남·광주, 제주가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남부권의 미래는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학자의 냉철한 분석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발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며 여러 특위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구상이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잇는 거대한 상생협력의 청사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허강무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의 도전이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01만호기자